



침소봉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흠집내기 중단하라

이 글은 9월 18일 발표한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임원진단(위원장, 부위원장, 대변인)이 사퇴했다. 임원진 일부가 연루된 폭행 시비 때문이다.

9월 16일 밤 가족대책위 임원진 일부 등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저녁 식사 후 귀가를 위해 부른 대리기사와 시비 끝에 폭행이 오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17일 가족대책위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던 가족대책위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임원진 총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히 드러날 것이기에 따로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권의 공작 여부 등 아직 구체적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가족대책위의 공식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편 실수가 포함된 사건이므로, 책임은 각자 개인 자격으로 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며 쌓아 온 신뢰와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선출직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도 아닌데, 왜 성인군자처럼 행동하지 못하냐고 가족대책위를 비난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가족대책위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나선 부모들일 뿐이다. 누가 무시하면 욕하며 실수도 하고, 정부가 분통 터지는 일을 하면 욕도 하는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우익 언론들이 ‘자칭 피해자’ 말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호들갑 떨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꼴볼견 그 자체다. 김무성이나 박희태 같은 여권 실력자들의 성추행은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는 것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대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을 흠집내려고 안달이다.

게다가 일방적 폭행이기는커녕 현재 가족대책위 임원들은 팔에 금이 가고, 이가 6개나 부러지는 증상을 입은 상태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자칭 피해자 측이 의도적으로도 발했다는 증언도 있다. 백 번 양보해 자칭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도 우연히 만난 개인들 사이의 우발적 쌍방 폭행 사건인데, 이것으로 수백만 명이 지지하는 운동의 대의를 깎아내릴 수는 없는 법이다.

둘째, 무엇보다 가족대책위는 지도부 개인들이 실수한 점을 즉각 사과했고, “공동의 도의적 책임”을 지며 운동의 대의를 존중하는 현명함도 발휘했다.

유가족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도 이처럼 양식 있게 행동하는데, 도대체 수백 명 목숨을 눈앞에서 죽도록 방치한 이 나라 정부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던 말인가. ‘3권 분립’ 운운하다가 사실상 국회 날치기를 지시하는 박근혜의 위선보다 천 배는 더 도덕적인 자세 아닌가.

셋째, 지난 다섯 달 동안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가족대책위야말로 정말이지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 가해자 격인 박근혜 정부가 외려 큰소리치며 유가족 모욕에 앞장서고, 경찰 완력으로 억눌러 왔는데도 말이다.

도대체 왜 죄 없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차가 다니는 시내 한복판 맨바닥에

서 잠을 청하고, 여름 땀벌 아래서 수십 일씩 단식을 벌여야 하는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 왜 색깔론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폭식 퍼포먼스 같은 일종의 관제 시위까지 벌어졌다. 이런 과정들 어디에 유가족들에게 ‘특권’이 있었는가.

이런 상황에서 9월 16일에 박근혜가 직접 나서 수사권과 기소권 수용을 거부하고 유가족이 경제살리기의 걸림돌인 것처럼 비난한 것이다. 업무시간에 사라져 구조 지휘 책임을 방기한 최고 책임자가 감히 이럴 수 있는가. 만약 폭행 시비의 발단에 유가족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면, 그것은 정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도발은 세월호 정국을 강제로 끝내자는 신호다. 날치기로 의료 민영화, 서민 증세 등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단어는 박근혜를 위해 준비된 것인 듯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폭행 사건도 정부에서는 세월호 끝내기 와 진실 가리기에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9월 21일(일)에 새 지도부를 뽑을 계획이다. 계속해서 원칙과 대의를 지킨다면 누가 지도부가 돼도 지지와 연대는 이어질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가족들의 국민간담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진실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 9월 27일(토) 범국민대회에도 수만 명이 참가해 정권의 분열·파괴 공작에 한 방 먹이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을 지지하고, 유가족들을 응원해 온 사람들이라면, 위선적이고 비열한 정부와 우익 언론들의 유가족 흠집 내기와 분열 시도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이호중 교수 초청 강연

—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대변인



이호중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연회 준비와 홍보를 함께할 대학생 여러분은 아래 주최 단체 번호로 연락 주세요!

9월 22일(월) 오후 6시 30분 | 이화여대 생활환경관 216호

주최: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010-8288-2652)

9월 23일(화) 오후 6시 30분 | 고려대학교 사범대 본관 113호

주최: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010-7113-3328)

참가비: 2,000원 (참가비는 강연 홍보비로만 쓰입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홈페이지 <http://stu.workerssolidarity.org/>